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일본, 전자제품, 사무기기업체 해외거점 생산구조 고도화 검토

일본의 전자·사무기기메이커들은 엔고로 경영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해외생산 비중을 높이거나 해외 생산품목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생산비중·현지조달 확대라는 기존노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해외 거점에서의 생산·판매품목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메이커들은 저가격·대량생산기 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저가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등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전자·사무기기메이커중 소니, 샤프 등은 의외로 엔고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상반기중 달러화대 엔화 환율을 달러당 110 엔선으로 설정, 엔고 회피책으로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코스트메릿을 찾아 해외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종래 엔고때와 거의 변함없지만 엔고가 장기화돼 정착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해외이전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와는 해외생산비중을 현재 65%에서 75%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 엔고로 일본내 생산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을 엿보게 했다.

이 회사는 특히 말레이시아공장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 일본내 생산감소분을 보전한

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샤프도 엔고와 현지수요 증가에 대응, 해외 생산비중을 현재 42%에서 조만간 50%로 높이기로 했다.

야마하는 일본내 사업재구축 작업과 연계, AV기기를 말레이시아공장에서 집약·생산키로 했다.

이밖에 카시오계산기가 해외생산 비중을 장차 35%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달러화당 엔화가 110엔대에 정착되면 사업 재구축 등 근본적인 엔고대책 수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달러당 100엔시대를 상정, 사업재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샤프社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판매를 강화해 나간다는 해외 사업전략을 수립했다.

이 회사는 경제개발과 함께 막대한 수요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수요증가에 착안, 이 지역에서의 사업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기종도 고급화를 서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구미 가전업계 일본시장 공략

유럽최대의 가전업체인 스웨덴 일렉트로라크스사도 자사의 제2브랜드 '자누시' 제품을 일본시장에 투입, 판매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월풀사의 대일공략은 세계최대의 가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자사브랜

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통괄회사 '월풀 아시아'의 설립을 발표한 동사의 데이빗 위트엄회장은 "최대의 라이벌은 마쓰시타전기산업"이라고 강조, "단기간에 판매실적을 올릴수는 없겠지만 아시아지역에 친숙한 브랜드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대일진출 의욕을 밝혔다.

월풀사의 아시아·라틴아메리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월풀 오버시즈'의 로버트 플라 이사장을 사회사령탑에 임명한 것도 동사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장기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코파마사는 수입건설팅회사인 메이코 엔터프라이즈사르 통해 100볼트사양의 회전드럼식 건조세탁기 'WD1001'을 발매, 일본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양사에 공통된 점은 일본시장에 일본사양 제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파마사는 건조세탁기 전원을 일본시장에 맞게 100볼트로 전환한 제품을 투입하고 있다. 세탁기 조작판도 일본어로 표시했으며 일본어 취급설명서도 작성했다.

또 월풀사도 자사제품이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보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일본 시장에 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사양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동사는 현재 룸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3종류의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하는 전제품에 대해 일본사양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에 진출하는 구미 가전업체들이 모두 성공을 장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시장에서의 가전제품 보급률은 거의 100% 가까이 달해 성숙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요주체는 교체수요에 국한돼 있고 교체사이클도 10년정도로 긴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마쓰시타, 히다치제작소, 도시바 등

수많은 일본메이커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진출한 대부분의 구미메이커들이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로버트 보슈사의 일본내 자회사인 '보슈'는 작년말 식기세척건조기 및 레인지 등의 일본내 가전제품판매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도시바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공동출자회사 'GE어플라이언스'의 GE제품판매사업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같이 구미기업의 대일진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풀사는 "안전기준 및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요구가 높은 일본에서 성공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 대일진출이 세계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3. 美·EC 통상마찰 再燃

美·EC 통상마찰이 최근 들어 재연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 美정부가 EC의 통신장비 정부조달시 美기업차별에 대해 보복조치를 발동하자 EC도 이에 뒤질세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패널설치를 요구하면서 맞보복조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美무역대표부(USTR)는 EC의 통신분야 불공정관행에 대응, 美전력청과 NASA 등 美연방정부기관의 통신분야 조달계약에 EC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통신장비 공공조달 입찰에 관한 EC규정이 역내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토록 압력을 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자간 통상마찰의 쟁점은 EC가 통신장비 등의 정부조달시 美기업을 차별한다는데 있었으나 지난 달 EC가 역내 물품의 우선구매 조항을 철폐키로 양보, 양자간의 분쟁은 일단

락되는 듯했다.

또 양자는 중전기 등 일부 통신분야에서도 부분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향후 시장개방을 위해 상호노력한다는 선에서만 합의를 도출, 이 분야에 있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두었다.

이번 조치로 EC기업들은 연간 2천만달러 규모에 이르는 전자기어제품 등의 분야 미경 부조달 계약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EC측은 미국정부의 빈번한 무역보복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논평을 각각 내보내는 동시에, 일부 EC산 철강에 대한 미조치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가트패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4. 북미자유무역협정 관세환급규정 누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과정에서 관세환급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미국 관련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널 오브 커머스紙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관세환급 규정은 원래 미국측 최종협상안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재수출을 전제조건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부품에 대해 관세의 99%를 수입시 일괄 환급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협정체결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미국 관련 업체들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매 수출시마다 수출상품내지는 사용된 부품이 사전에 수입된 것임을 자국 관세청에 입증해야 한다.

관세환급 규정의 삭제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은 국내생산부품과 수입부품을 동시에 혼합 사용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환급 규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94년과 95년 두

해 동안 관세환급규정 삭제에 따른 미 업계의 업무비효안도 7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미 업계가 입계될 관세환급 손실액도 약 1억 4천만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美무역대표부의 관리들이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방침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캐나다와 미국사이에 체결돼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안책도 제시하고 있다.

FTA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재수출을 전제조건으로 한 상품 및 부품에 대한 일괄 사전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도 NAFTA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사실상 금년말 효력이 만료된다.

미 관련업체는 애당초 관세환급에 관한 NAFTA의 규정이 오는 94년과 95년 두 해 동안만 해당되는 것으로 96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던 것이 만큼 FTA의 효력을 2년 연장함으로써 관세환급 규정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5. 歐美메이커, HDTV규격 통일

AT & T, 제너럴·인스트루먼트 등 구미의 유력 기업들이 최근 미국에서의 고화질TV(HDTV)의 규격을 일원화하기로 합의, 곧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규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그간 HDTV의 표준화가 진통을 겪어 왔는데 이번 합의로 HDTV 실용화에 큰 진전을 보게 됐다.

미국에서의 규격통일에 합의한 업체는 3개 그룹으로 갈라져 표준화 경쟁을 벌여 온 AT & T, GI외에 제니스·일렉트로닉스, MIT(매세추세즈공과대학), 데빗·서노프연구소, 佛톰슨,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의 기업 및 대

학.

FCC는 앞으로 이들 기업이 제출한 통일규격안의 접속실험 등 기술적인 측면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규격안이 유일한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규격안이 미국의 표준규격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HDTV를 차세대 일렉트로닉스의 전략상품으로 선정,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NHK(일본방송협회)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송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FCC는 93년말을 목표로 표준규격의 선정을 완료하고 2008년까지 현행의 방식으로부터 HDTV로 전면 이행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3개 그룹이 기술의 우위를 주장, 양보하지 않아 그간 검토작업이 막바지에 진통을 겪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때문에 표준화작업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번 제휴로 이같은 불안이 해소되고 94년엔 규격이 굳어져 95년엔 미국에서도 HDTV수상기의 商戰이 시작될 전망이다.

HDTV는 일본이 개발경쟁에서 앞서 80년대엔 美日하이테크마찰의 초점이 됐다. 미국에서는 관민 공동으로 독자적인 규격마련이 시작됐다.

NHK방식은 ‘디지털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일찌기 탈락했다 결국 NHK를 배제한 나머지 3개 그룹의 4개 규격에 제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업계단결의 배경에는 FCC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심사에 남은 규격은 ▲ AT & T-제니스·일렉트로닉스 ▲ 제너럴·인스트루먼트-MIT ▲ 拂툼슨-NBC 등의 연합인데 우열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가전제품메이커들은 이번 구미기업의 HDTV규격통일 합의에 대해 미국에서의 HDTV가 실용화를 위해 한발짝 전진했다고 환영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미국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상품은 일본과 다른 규

격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6. EC, 한·EC관계보고서

EC집행위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韓國·EC 관계에 관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관측통들은 이번 이사회에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결의문이 채택돼 향후의 對韓 관계강화는 물론 더 나아가 對아시아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C집행위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신을 비롯한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차별조치, 비관세장벽, 수입반대캠페인,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외국인투자장벽 등 EC기업들을 차별하는 각종 무역 및 투자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위는 한국정부가 EC와 산업 및 무역분야의 관계강화를 희망한다면 먼저 한국내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시장개방도 일정에 맞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정부가 EC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과의 과학, 기술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집행위 보고서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91년 양자간에 체결된 지적재산권보호협정에 의약 및 농화학분야가 추가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상표위조방지 및 해적행위 금지노력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 시장접근=상당한 수준의 관세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EC산 주류에 대한 한국의 관세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EC산 자동차수입제한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통신 등 공공조달시장=한국의 관련 법규에 EC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조치는 시정돼야 한다.

▲ 금융서비스=EC은행들의 한국내 비생명보험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

▲ 외국인투자=한국의 관련법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적인 조항을 상당수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해외 자본도입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7. 우루과이 라운드, 연내 타결전망

최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새 활기가 감돌고 있다.

EC통상대표인 레온 브리턴 EC집행위 부위원장은 25일 우루과이라운드에 새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7월중 도쿄에서 열리는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 이전에 공산품분야에 대한 합의가 주요선진국들 간에 도출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美정부가 12월 15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테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프랑스의 새 정부도 美·EC간 농업부문협정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르투어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총장도 지난 1년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온 우루과이라운드가 연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6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BC) 서울 총회에 참석한 둔켈 총장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전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美정부가 보여준 확고한 타결의지와 여타 협상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맞물려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로 쌍무협상에 의존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온 클린턴 美정부는 지난 달 美의회에 정부의 패스트트랙권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최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美무역전문지인 유에스 인사이드 트레이드 등 일부 관측통들은 美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새 다자간협상 즉 ‘클린턴라운드’를 개시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마무리를 몰아부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11일 美하원세입위원회는 美의회 신속처리절차인 美정부의 패스트트랙권한을 연장해주시기로 결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연내 타결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었다.

이 연장안은 하원 및 상원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의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는 이와 관련, 오는 7월의 G-7회의시까지 EC, 일본 등의 주요협상 파트너들과 공산품 및 농산물의 시장접근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 7월의 G-7회의의 5개 의제중 하나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연내종결 문제가 24일 채택된 것으로 밝혀져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